

충남리포트 제77호 2013. 4. 29

에코뮤지엄을 통한 충남 자연환경 보전 방안

여 형 범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hbyeo@cdi.re.kr)

목 차

< 요 약 >

1. 들어가는 글
2. 충남의 자연환경 보전 현황과 과제
3. 에코뮤지엄의 원칙과 국외 사례
4. 충남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에코뮤지엄 적용 방안
5. 나가는 글

〈요 약〉

- 충남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연 환경 보전이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실천들을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재정 여력과 권한이 부족한 시·군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인접한 타 시·군, 충청남도,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과 상호지원이 필수적이며, 지역개발, 농업, 도시계획,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부문의 정책들과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에코뮤지엄은 일정한 '영역'에 산포되어 있는 유산이나 무형의 기억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유산 및 기억을 수집·보존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박물관임
- 이러한 에코뮤지엄 원칙과 실천은 행정 경계와 부문별 칸막이를 뛰어 넘어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충남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에코뮤지엄의 원칙과 실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이용한 지역정체성의 재구성,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계, 에코뮤지엄과 관련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협력의 거버넌스 구성, 지역 공동체의 역량 증진과 더불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을 과제로 제시함

1. 들어가는 글

- 에코뮤지엄은 기존 박물관처럼 건물 내에 어느 장소를 한정하지 않고, 어떤 지역의 일정한 '영역'에 산포되어 있는 유산이나 무형의 기억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유산 및 기억을 수집·보존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박물관임¹⁾
 - 기존 박물관의 수집, 연구, 전시, 교육이라는 박물관 활동이 행정구역, 전문가, 유산을 수집하고 전시한 건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에코뮤지엄은 수집, 연구, 전시, 교육이라는 박물관 활동이 유역, 문화권, 언어권 등의 영역, 지역공동체, 현지에 보존된 유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이러한 에코뮤지엄 원칙과 실천은 행정 경계와 부문별 칸막이를 뛰어넘어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기존 국내 자연환경 보전 사업들은 자연환경 부문에 국한되어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에코뮤지엄은 자연, 생태, 경관, 역사,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부문들을 통합해서 접근함으로써 실행력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음
 - 기존 국내 자연환경 보전 사업들이 행정 경계 내에 국한되는 반면 에코뮤지엄은 행정 경계를 넘어 동일한 특징을 갖는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에코뮤지엄은 개발의 효과가 불확실한 곳에서 보전을 통한 지역 발전을

1) 에코뮤지엄은 자연환경(자연유산)뿐만 아니라 산업유산, 문화유산 등을 함께 다루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자연환경(자연유산)에 초점을 맞추었음. 이 글에서 소개하는 에코뮤지엄 원칙과 실천들은 충남의 산업유산과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방안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임. 특히 많은 에코뮤지엄들이 도시보다는 농촌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모색하며, 보전이 지역 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곳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박물관 실천을 모색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 국내 에코뮤지엄 관련 기존 문헌들은 에코뮤지엄을 다소 정형화된 구성 요소로 제시하고 있음(배은석, 2012)
 - 에코뮤지엄을 구성 요소 측면에서 영역(territory), 거점박물관(core museum), 지역유산(satellite), 탐방로(discovery trail)로 구성되는 것으로 제시
 - 거점박물관은 에코뮤지엄의 본부로서 지역유산 및 접근방법을 소개·안내하는 관광안내센터의 역할을 수행, 지역유산은 현지에서 보존되는 자연유산, 문화유산, 산업유산으로 구분, 탐방로(trail)는 거점박물관과 지역유산을 잇는 길
 - 하지만 거점박물관, 지역유산, 탐방로 등으로 구성된 에코뮤지엄이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며 지역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에코뮤지엄이 존재함
- 이 글에서는 에코뮤지엄의 구성 요소나 형태보다는 에코뮤지엄의 원칙과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에코뮤지엄을 도입하거나 조성하는 것에 앞서 에코뮤지엄 원칙과 실천들이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의 보전과 활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를 기초로 기존 사업과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봄
 - 에코뮤지엄 원칙과 실천들에 대한 폭넓은 공감과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에코뮤지엄 조성은 원래 추구하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건물, 시설, 프로그램 개발에 국한될 가능성이 큼

2. 충남의 자연환경 보전 현황과 과제

1) 충남 자연환경의 보전 현황

- 전 세계 국가들은 일부 차이는 있지만 자연환경을 개발이나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보존지역, 보호지역, 국립공원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자연환경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관리²⁾
 - 국내 자연환경 보호지역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등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야생동물보호구역,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을 포함
 -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랍사르협약에 의한 랍사르습지,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의 지질공원 등 국제 보호지역도 지정되어 있음
- 충청남도 내 주요한 자연환경들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자연공원 등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음
- 충남의 곳곳에 산재한 자연환경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
 -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중앙정부가 지정한 곳으로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곳은 없음³⁾

2) UN환경계획에서는 보호지역을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기능이 유지·보호될 수 있도록 법 또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관리되는 육지, 담수, 해수나 하구의 일정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UNEP, 1993).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보호지역을 합법적 또는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통하여 관리되며, 생물다양성, 자연, 관련 문화 자원의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제공된 육상 또는 해양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IUCN, 1994).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보호지역을 특수한 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 조절,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으로 정의함(UNEP, 2006).

- 녹색성장국가전략에서 전국 보호지역의 면적을 2009년 10만ha에서 2020년 15만ha, 2050년 25만ha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어 향후 자연환경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예상됨
- 특히 우리나라가 2014년 생물다양성 총회를 유치함에 따라 자연환경 보호지역 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도 클 것으로 예상

〈표 1〉 충남의 자연환경보호지역 현황 (2010년 현재)

구분	전국		충남	
자연환경보전지역	240개소	706km ²	22개소	17.66km ²
-생태·경관보전지역	35개소	363km ²	2개소	0.76km ²
-습지보호지역	28개소	333km ²	2개소	15.37km ²
-특정도서	177개소	10.68km ²	18개소	1.53km ²
야생동·식물보호구역	289개소	894km ²	63개소	98.3km ²
자연공원	78개소	7,860km ²	6개소	502km ²
-국립공원	20개소	6,581km ²	2개소	422km ²
-도립공원	31개소	1,040km ²	3개소	78km ²
-군립공원	27개소	239km ²	1개소	2km ²

- 자연환경보호지역을 비롯한 자연유산 지역 내 또는 인근의 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은 자연유산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법에 동의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남
 - 많은 자연환경 보전 사업들이 행정이나 전문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주민이나 이해당사자들은 사업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수동적인 참여에 그쳐 책임 있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함

3)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은 시·도가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한강바람, 둔촌동 자연습지, 남산 등 17곳을 자체적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울산시(태화강), 강원도(대덕산·금대봉), 전남도(광양백운산), 경기도(조종천상류), 경남도(거제시 고란초 서식지)도 한 곳씩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대구시(달성하천습지), 대전시(대청호 추동습지), 인천시(송도갯벌)가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환경부와 경기도는 DMZ 일원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꾀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은 생물권보전지역을 개발 규제 장치로 인식하여 반대
-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보전이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실천들을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을 성공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는 사례들에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주요한 성공 요인임
 - 주변지역 주민들이 자연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협약, 주민감시단, 생태여행, 마을기업 등 여러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 보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할 가치가 큰 자연환경이 인간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토지의 매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공생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고 있음(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의 경우 매화마름이 자라는 논에서 재배한 쌀을 ‘매화마름쌀’로 브랜딩하여 전량 판매)
- 또한 재정 여력과 권한이 부족한 시·군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인접한 타 시·군, 충청남도,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과 상호지원이 필수적임
 - 국내 자연환경 보전의 성공적인 사례 지역인 전남 순천시 순천만과 경남 창녕군 우포늪은 시·군이 주도하지만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지원 프로그램, 랍사르 습지 지정 등 국제적인 협력, 인근 지역 지자체와 함께 하는 광역적인 자연환경 보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음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활용 정책은 지역개발, 농업, 도시계획,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부문의 정책들과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및 자연환경 정책은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상이한 법, 예산, 조직을 통해 집행되고 있으며, 이는 충남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임
-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정책만으로는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자연환경 훼손 및 생물다양성 손실 추세를 완화하기 어려움
- 행정구역 경계와 부서별 칸막이 업무를 넘어서는 공동 활동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비전 제시, 동기 부여가 필요

2) 충남 자연환경 관련 주요 현안들

○ 서천군 국립생태원

- 서천군은 국립생태원을 대안사업으로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 국립생태원이 서천군의 지역사회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으며, 환경부가 국립생태원 건립과 운영을 주도하고 있기에 서천군민들이 국립생태원에 기대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 국립생태원이 서천군을 비롯한 충남의 자연유산 보전과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천군 및 충남의 자연유산 거점들 및 프로그램과 연계 필요

○ 예산군 황새마을

- 예산군은 국내에서 멸종된 황새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유치하였으며, 황새의 서식지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황새마을을 조성하여 유기농, 농수로복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황새마을의 생태적 조건이 황새가 먹이를 섭취하고 번식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황새는 생활공간이 인근 시·군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런 점에서 볼 때 황새복원은 예산군만의 사업이 아닌 황새 생활

권의 모든 시·군이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임

○ 서해안 철새 도래지

- 충남은 넓은 면적의 농경지, 호소, 해안선이 발달해서 오리, 기러기, 섭금류 등의 중요한 서식지가 위치하며, 아산만, 천수만, 금강하구, 유부도 등 섭금류의 동아시아 중간기착지이자 오리기러기류의 월동 서식지로서 가치가 매우 큰 지역⁴⁾이지만, 서해안 지역의 간척으로 인한 서식지 여건 변화, 연안 수질 악화, 먹이 감소 등으로 인해 철새 서식지로서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음
- 농경지, 호소, 연안 관리를 위해서는 충남 내 특정 시·군에 국한되는 대응이 아니라 서해안 시·군의 공동 대응이 필요

○ 금강 하굿둑

- 1990년대에 금강 하구역의 홍수 및 염해 피해 등을 막기 위해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수질 악화, 토사 퇴적, 회류성 어류 멸종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충청남도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청양군 등 금강 하류 시·군은 금강 하굿둑의 구조 개선을 통한 해수 유통 및 수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농업용수 이용을 이유로 반대
- 금강 하구역의 생태적 기능을 복원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금강 하굿둑의 기존 기능인 농업용수 공급을 유지하거나 대체할 방안을 찾기 위한 금강 하구역 전체의 논의와 협력이 필요

○ 걷는 길 조성 사업

- 제주 올레길의 성공 이후 전국의 지자체들은 독자적인 길을 조성⁵⁾

4) 전 세계 가창오리 생존개체수의 90%가 금강하구 인근에 서식하고,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 청다리도요사촌이 유부도 조간대에 중간기착하며,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큰고니, 개리 등이 서해안 일대에 서식함

5) 충남 지역에는 태안 바닷길을 걷는 '태안바라길', 충남의 옛 성을 따라 걷는 '고성가도', 공주와 부여의 핵심 여행지를 잇는 '백제길', 공주 금강 및 연미산을 따라 걷는 '곰나루 명승길', 부여의 백제 문화를 경험하는 '사비길'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홍성군,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등 충남 서부권 자치단체는 내포문화권에 조성되어 있는 내포문화숲길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숲길 상품화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공동 추진

하고 있으나 전국의 걷는 길 조성 사업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생태계 보전과 이용,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라는 가치는 사라지고 관광상품화에 치중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안전 문제와 관리·운영의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

- 걷는 길 조성은 단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역정체성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걷는 길 조성 계획과 운영 전반에 걸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3. 에코뮤지엄의 원칙과 국외 사례

1) 에코뮤지엄의 원칙

- 에코뮤지엄의 원칙은 에코뮤지엄 주창자와 적용 지역, 적용 시기에 따라 변화해왔음⁶⁾
 - 에코뮤지엄 개념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 나타난 “신박물관학”으로 알려진 사조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표현인데, 신박물관학은 박물관들이 어떻게 소외된 계층을 돕고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전환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음
 - 1970년대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양식과 삶의 터전인 공간 전체를 박물관으로 보고,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유산의 보전이 지역공동체에 편익을 가져오도록 하는

6) 에코뮤지엄의 원칙과 국외 사례는 Borrelli and Davis (2012), Corsane et al. (2007), Davis (2011), Maggi (2009), 여경진 (2007)을 참조.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채택되어 왔음

-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에코뮤지엄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요 목적으로 제시
 - 최근에는 에코뮤지엄 조성을 통해 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흐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생태여행, 책임여행, 공정여행 등의 원칙들이 강조되고 있음
- 이처럼 에코뮤지엄의 원칙은 지역의 특성과 목표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원칙들이 있음
- 특히 ‘공동체’(community) 참여, 행정구역이 아닌 특정 정체성을 지닌 ‘영역’(territory)에 기초, 건물에 모아 놓은 유물이 아닌 현지에 보존된 유형·무형적 ‘유산’(heritage)을 공통적으로 강조함

2) 프랑스의 에코뮤지엄

- 프랑스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리비에르(Georges Henri Riviere)와 바린(Hugues de Varine)’은 대안적인 박물관 사업들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에코뮤지엄 철학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킴
- 많은 유산과 박물관 전문가들은 에코뮤지엄 아이디어가 자신들의 새로운 박물관 실천을 뒷받침한다고 믿었으며, 신박물관학(new museology), 통합적 박물관(integrated museums), 지역공동체(communitiy) 주도 등에서 촉진된 아이디어들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특히 농촌과 탈산업지역에서 에코뮤지엄은 점점 더 빠르게 사라져 가는 민속 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음

7) 데이비스는 ① 전통적인 경계로 규정되지 않는 ‘영역’의 채택, ② 현지 내 보전 및 해석에 연결되는 ‘분산된 사이트’ 정책의 채택, ③ 전통적인 사이트 소유권 관점 대신 사이트의 보전과 해석은 연결(liaison), 협력, 파트너십 개발에 의해 수행, ④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empowerment)를 위해 에코뮤지엄 활동과 문화 정체성 형성에 지역 주민들을 포함, ⑤ 학제간 해석 및 전일적 해석의 잠재력 등을 주요한 특징으로 꼽음. 보이란도 비슷하게 영역, 분산(fragmentation), 학제적인 접근을 통한 해석, 에코뮤지엄 소비자의 본성, 지방 민주주의와 커뮤니티 권한 강화를 특징으로 꼽음 (Coursane et al. 2007).

- 1990년대 초에 프랑스 문화부의 문화재국(DMF)은 사회역사와 지역공동체 생활을 다루는 모든 박물관들(역사박물관, 인류학 및 민속지학 박물관, 해양박물관, 생활사박물관, 에코뮤지엄 등)을 사회박물관으로 분류하는 결정을 내림
- 문화재국의 결정 이후 에코뮤지엄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박물관들과 더 강하게 연결되기 시작함
 - 1991년 사회박물관과 에코뮤지엄들이 참여하는 FEMS를 설립
 - 2010년 현재 FEMS는 200개 박물관, 1500여명의 직원과 3000여명의 자원활동가를 대표하는 140여명의 회원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FEMS 회원 박물관 중 54%는 국가에 의해, 46%는 민간이 운영
 - FEMS의 역할은 주로 토론회 및 콜로키엄 조직, 설문조사, 훈련 및 자문, 회원 조직 지원, 출판 등이며, 참여 확대, 지속가능한 발전, 박물관과 관광 관계 등 FEMS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음

3) 이탈리아의 에코뮤지엄

- 이탈리아에서는 1970년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문화 재발견 운동이 활발했음
- 1990년대에 북부 이탈리아 지역의 정치적 분권(devolution)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역 정체성의 주요 요소로 문화가 주목 받기 시작함
 - Argenta (Emilia-Romagna), Casentino (Tuscany), the Vanoi and Giudicarie Valleys (Trentino), the Elvo Valley (Piedmont) 등 첫번째 세대의 에코뮤지엄이 만들어짐
 - 이 사례들은 국내외 다른 박물관 운동들과 연결되면서 정당성을 획득하고 에코뮤지엄유형의 박물관 도입을 확산시킴

- 이탈리아의 에코뮤지엄은 수용이 매우 늦었지만 다른 국가들과 달리 법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 피에몬테(Piedmont)와 트렌토(Trento)에서는 각각 1995년과 2000년에 에코뮤지엄의 설립과 발전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다섯 지역에서 조례가 통과됨
 - 1999년 15개에 불과했던 이탈리아의 에코뮤지엄은 2006년 피에몬테에서만 50개로 늘어나고, 2010년 이탈리아 전역에 142개의 에코뮤지엄이 운영되었고 준비 중인 에코뮤지엄을 포함하면 193개에 이름

- 2006년 "Local Worlds"라는 에코뮤지엄 유럽 네트워크가 출범한 이후 이탈리아의 21개 에코뮤지엄들이 <Mondi Locali>라는 지부를 만들
 - *Mondi Locali*는 이탈리아 내 에코뮤지엄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그룹과 지방 리더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서로를 알게 하고 서로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에코뮤지엄 직원들을 위한 많은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 매뉴얼을 발간하며 훈련을 지원하고 있음
 - *Mondi Locali*의 회원인 에코뮤지엄과 비회원 에코뮤지엄, 다른 박물관 사이의 관계는 지역별로 상이한데, 가령 Trentino에서는 모든 법적으로 인식된 박물관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때문에 박물관들 사이에 갈등이 없으나, Tuscany와 Puglia에서는 에코뮤지엄을 규제하는 법이 없으며 비공식적 지역 조정 위원회가 *Mondi Locali*의 원칙을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됨

4) 일본의 에코뮤지엄

- 일본에서는 에코뮤지엄을 ‘지역 통째로 박물관’ 또는 ‘지붕 없는 박물관’ 등의 이름으로 부르며 농촌의 마을만들기 등과 연계하고 있음(여경진, 2007)
 - 지역 박물관 건설 붐이 마무리된 후 기존의 다양한 유산을 얼마나 보다 잘 활용할지가 중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과의 상호 교류나 주민 사이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그 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것이 요구됨
 - 1992년 리우회의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에코뮤지엄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공동체의 지원을 조율하는 해결책으로 논의됨
- 1995년 일본 에코뮤지엄 학회(Japanese Ecomuseological Society, JECOMS)가 설립된 이후 ‘Journal of the Japanese Ecomuseological Society’라는 학술지를 발간
 - JECOMS는 2002년 ‘일본 에코뮤지엄 지도’를 발간
 - 타마가와와 연계된 산업유산과 종교적 건물이 복합된 사이트로서 타마가와(Tamagawa), 멸종위기종(황새) 보전과 관련된 고우노토리 에코뮤지엄(Kounotori Ecomuseum), 도쿠시마현의 아산 라이브 박물관(Asan Live Museum) 등을 소개

5) 중국의 에코뮤지엄

- 중국은 소수민족 문화의 보존과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
 - 중국에는 56개의 소수민족이 전체 인구의 8.4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소수민족이 사는 격오지들이 중국 에코뮤지엄 정책의 주요 대상지임

- 중국에서 에코뮤지엄은 가난한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중국의 전문가들은 노르웨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Liuzhi 원칙⁸⁾을 준비하였으며 이를 중국 내 에코뮤지엄 사업에 적용하였음
- 중국정부는 에코뮤지엄을 소수민족들로 하여금 문화 정체성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회 경제적 개발을 수행하는 도구로 제시됨
- 그러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 중국 내 소수민족의 생활 문화가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되고 있다는 비판 제기
 - 중국의 에코뮤지엄은 위계적인 행정 조직을 통해 하향식으로 전개되었기에 지역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에코뮤지엄의 운영과 전략적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문화 관광을 통한 경제적 편익이 지역공동체에 공평하게 분배되는지 등이 분명하지 않음

8) 중국 에코뮤지엄의 Liuzhi 원칙 - 마을 주민들이 문화의 참된 주인이며 그들 스스로 문화를 해석하고 정당화할 권리를 지님 | 문화의 의미와 가치는 지식에 기초한 인식과 해석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음. 문화적 능력이 증진되어야 함 | 대중 참여는 에코뮤지엄에 반드시 필요하며 문화는 공동의 자산이며 민주적인 자산이므로 민주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관광과 문화의 보존에 갈등이 있을 때는 문화의 보존이 우선되어야 함 | 진짜 유산은 판매되어서는 안 되며, 전통적 기술에 기초한 기념품들의 생산이 증진되어야 함 | 장기적이고 전일적인 계획이 가장 중요함. 장기적으로 문화를 파괴하며 얻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은 지양되어야 함 | 문화 유산 보호는 전체 환경 접근에 통합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전통적 기술들과 물질들이 필수적임 | 방문객들은 조심스럽게 행동할 도덕적 의무를 지며 그들은 에코뮤지엄 내에서 행위 규칙을 제시받을 것임 | 에코뮤지엄을 위한 바이블은 없으며 특정 문화와 상황에 따라 상이 | 사회 발전은 살아있는 세계 내에서 에코뮤지엄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전통 가치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주민의 생활이 증진되어야 함 (자료: Davis, 2011, 238쪽)

6) 에코뮤지엄 사례의 시사점

- 에코뮤지엄의 원칙과 실천은 197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박물관 운동의 한 조류였으나 에코뮤지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에코뮤지엄 원칙에 충실한 박물관들이 있음
 - 미국의 이웃 박물관(Neighbourhood museums), 독일, 특히 베를린의 도시 헤이마타 박물관(Heimat museums), 중남미, 특히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의 지역공동체 박물관 등
- 또한 현재 많은 박물관 조성과 활동들에서도 에코뮤지엄 원칙들이 공유되고 있음
 - 최근 국내에서도 박물관 조성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전시뿐만 아니라 이동 전시, 체험 교육 등 일반인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 다만 여전히 행정, 전문가, 박물관 건물, 유물이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박물관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한계
- 기존 박물관 활동이나 자연유산 보전 운동과 에코뮤지엄 실천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 기존 박물관 활동에도 영역, 공동체 참여, 유산의 현지 보전이라는 에코뮤지엄 원칙들을 적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음
 -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사례와 같이 기존 박물관(협회)들과 에코뮤지엄의 공동 활동은 재정, 인력, 자원 등이 부족한 에코뮤지엄 활동의 지속성을 도울 수 있을 것임

4. 충남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에코뮤지엄 적용 방안

1) 자연환경을 이용한 지역정체성의 재구성

- 에코뮤지엄 실천은 산림이나 유역 등 자연환경을 경계로 하는 지역정체성을 재구성해낼 수 있음
 - 지역공동체가 해체되거나 새롭게 행정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자연환경은 지역 주민들 사이의 유대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임
 - 세종시, 내포신도시 등의 새로운 도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주민들의 소속감과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
- 충남은 15개 시·군의 생태지도 작성과 충남 전체의 광역생태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되고 있기에 이를 지역사회 지도 제작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에코뮤지엄의 중요한 수법 중 하나인 지역사회 지도 작성 프로젝트에 생태지도를 활용<표 1 참조>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환경 및 생물들을 표시하는 다양한 지도를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자연환경에 및 생물에 대한 관심을 유도
 - 실측 지도뿐만 아니라 영상, 소리, 사진, 그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지도에 반영하고, 자연환경과 생물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전설, 이야기, 노래, 민속 등 문화들을 함께 조사하여 수록
 - 지도 작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장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의 중요성을 인지할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

〈표 2〉 이탈리아 파라비아고 경관 에코뮤지엄의 지역사회 지도 작성 사례

- 파라비아고 경관 에코뮤지엄은 파라비아고 의제21의 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에코뮤지엄 실천계획을 만들었으며, 파라비아고 시 의회는 2008년 5월 에코뮤지엄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킴
- 파라비아고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 싶고 자신들을 되돌아보길 원하는 핵심적인 유산들을 기초로 커뮤니티 지도(map of the community)를 만들었음
 - 지도에는 장소, 특징, 이름(방언), 전통 요리, 숙담 등 지역과 주민들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담김
 - 2006년~2007년 사이 지역의 핵심 장소(places of the heart)를 꼽고자 에코포럼 참석자, 에코뮤지엄 프로그램 참가 학생 등에게 설문 조사 시행
 - 초기 지도 작업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는 성인들의 참여를 유도함
 - 이 지도 작성 이후 '소리 지도'(sound map)와 웹상에서 수정이 가능한 지도(interactive map)도 만들어 공개함

2)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계

- 에코뮤지엄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인구가 줄고 경제가 쇠퇴하고 농경문화를 비롯한 각종 생활문화가 사라져가는 농촌에서 농경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문화관광이나 생태관광을 비롯한 로컬푸드, 지역브랜드, 6차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
- 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시키는 활동은 지역 생물다양성을 보존에 기여할 수 있음
 - 이탈리아 '루니지아나 산(Lunigiana Mountain) 에코뮤지엄'은 멸종 위기에 처한 토종 쿡을 복원하고 토종쿡을 이용한 메뉴를 로컬푸드 식당과 연계하여 개발하고 더 나아가 빵 생산 과정에 지역의 전통 밀을 재도입하고자 하였으며, 평가 작업을 통해 지역의 숲 면적 중

68%가 바이오매스와 생태여행에 적합한 자원임을 보여주고, 물, 선사, 중세 예술, 밤나무, 바위, 경제와 산업 고고학, 농업 경관, 나치 파시스트 대량학살 기억, 귀족들의 마을을 엮어내는 생태여행 프로그램을 운영

- 이탈리아 ‘카센티노 에코뮤지엄(Casentino Ecomuseum)’에서도 삼림과 목재, 특히 밤나무에 기초한 지역 경제가 고령화, 임업 기술 상실, 토지 포기 등에 의해 위협받게 되자 주민들은 나무꾼들의 옛길을 복원하고 전통적인 돌 건조기를 수선하는 등 밤나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고급 밤과 밤가루를 틈새시장에 팔고 밤나무 칩은 건조기와 마을 집단 에너지 시설에 사용하였고, 마을에 밤을 이용한 식당을 열고, 문화와 유산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조직(Raggiolo Brigade)을 설립하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활성화됨
- 영역, 공동체 참여, 유·무형 유산의 현지 보존이라는 특징을 공유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면 에코뮤지엄의 적용은 더욱 용이
 -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업유산제도,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슬로푸드, 로컬푸드, 생태하천 조성, 생물종 복원, 6차산업화 등의 활동들은 에코뮤지엄의 원칙 및 특징들을 상당 부분 공유

3) 협력의 거버넌스 구성

- 에코뮤지엄의 네트워크 또는 에코뮤지엄과 다른 박물관 운동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등을 포함하는 프랑스어권의 FEMS는 1989년, 일본의 JECOMS는 1995년, 폴란드의 Ekomuzea는 2005년, 중국의 Ecomuseum Office는 2006년, 브라질의 ABREMS는 2007년에 형성한 바 있음

- 또한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보전지역(MAB) 프로그램 등 에코뮤지엄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프로그램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생물다양성은 인간들의 활동에 의존하며, 생물권보전지역은 농민들이 전통적인 관리체제를 증진하고 전통 농가 건물과 마을숲을 복원하고, 농산물에 상표를 붙이는 활동들을 지원함
 - MAB 프로그램에서는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여러 사이트들이 연계되어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보전 활동이 결합됨
 - 가령, 스웨덴 'Kristianstads Vattenrike 에코뮤지엄'은 MAB와 에코뮤지엄 실천이 강하게 연계된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음
 - 유네스코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s), 세계식량기구의 세계중요문화유산(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커뮤니티에 기초한 보전 지역(Community-Conserved Areas, CCAs), 세계생태마을네트워크(Global Ecovillage Network, GEN) 등도 에코뮤지엄의 취지와 유사함
- 충남의 경우에도 금강하구, 유부도, 서해안 갯벌 등 중요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세계유산 지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경우 행정 중심의 하향식 과정보다는 에코뮤지엄 원칙과 실천을 적극 도입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지역 공동체의 역량 증진

- 에코뮤지엄은 보전과 개발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는 만능열쇠나 만병통치약은 아님
 - 보전과 개발 사이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으며, 에코뮤지엄이 몇몇 핵심 인물들에 의존하고 있거나 지방정부나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을 경우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중국처럼 원주민이 아닌 중앙정부나 관에서 주도함에 따라 원주민들은 에코뮤지엄의 설계와 운영에서 소외되기도 함
- 에코뮤지엄은 '실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수단이 되어야 함
 - 재정, 기술, 인력 등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연결
 - 자원활동가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지하고, 자원활동가들이 문서작성, 연구, 해설자, 방문객 서비스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
 -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공동 소유-관리-투입,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한 강조가 에코뮤지엄 운영의 핵심
- 에코뮤지엄은 지역 주민들의 역량 증진과 더불어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우선 지역공동체의 가치 발견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단계로, 지역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조사, 발굴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함
 - 다음으로 지역의 사람과 자원이 연합하는 단계로 지역 공동체와 지역 자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함
 - 마지막으로 에코뮤지엄이 외부와 관계 맺기를 하는 단계로, 지역을 찾은 방문객 또는 같은 취지를 갖는 단체들과 연합하면서 활동을 하는 등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토록 함

5. 나가는 글

- 충남은 과거 에코뮤지엄이 구상된 바 있으며 현재도 에코뮤지엄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실천들이 진행되고 있음⁹⁾
- 에코뮤지엄 원칙과 실천이 충남에서 충분히 발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에코뮤지엄을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에코뮤지엄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꾀할 경우에도 관광객들을 위한 장소 판촉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밀접하게 연계된 생태 관광과 문화관광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이 글에서는 에코뮤지엄의 원칙과 실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자연 환경을 이용한 지역정체성의 재구성,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계, 에코뮤지엄과 관련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협력의 거버넌스 구성, 지역 공동체의 역량 증진과 더불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 에코뮤지엄은 그 형태와 거버넌스가 상이하기 때문에 충남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는데 적합한 보다 구체적인 에코뮤지엄 원칙과 실천들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임

9) 금산군에서 2005년 에코뮤지엄 계획을 수립한 적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로 변모하기 전 연기군의 향토 자원과 문화를 보전하고자 하는 에코뮤지엄이 구상되기도 하였음. 최근 충남 시·군의 역사문화도시, 근대역사문화 복원, 산업단지를 활용한 문화 재생, 걷는 길 조성 등의 사업은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에 관련된 에코뮤지엄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충남도가 2012년 발표한 『금강비전』에서도 금강 전역을 에코뮤지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주요한 추진 전략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음(충청남도, 2012).

◆ 참고 자료 ◆

- 배은석, 2012,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에코뮤지엄 모델 연구: 이천 울면 부래미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여경진, 2007, “일본 에코뮤지엄의 형성과 목적”, 농촌관광연구 14(1), 111-137.
- 충청남도, 2012, 지속가능한 금강의 미래발전을 위한 금강비전.
- Apgar, J. Marian, James M. Ataria and Will J. Allen, 2011, "Managing beyond designations: supporting endogenous processes for nurturing biocultural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7(6), 555-570.
- Borrelli, Nunzia and Peter Davis, 2012, "How Culture Shapes Nature: Reflections on Ecomuseum Practices," *Nature and Culture* 7(1), 31-47.
- Corsane, G. et al., 2007, "Ecomuseum Evaluation: Experiences in Piemonte and Liguria, Italy,"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3:2, 101-116.
- Davis, Peter, 2011, *ecomuseums: a sense of place (2nd edition)*, New York: Leicester University Press.
- Maggi, Maurizio, 2009, "Ecomuseums in Italy. Concepts and practices," *MUSEOLOGIA E PATRIMÔNIO*, 2(1), 70-78.

여 영 범, hbyeo@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Tel. 041-840-1276

충남리포트 발간리스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 · 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 · 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 · 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 · 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준문 · 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 · 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 · 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메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 · 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 · 이상준외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 · 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 · 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 · 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 · 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 · 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 · 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 · 김양중	2010. 2.24
2010-03	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분석	임재영	2010. 3.10
2010-04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	이용재 · 임준홍	2010. 3.18
2010-0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	이충훈 · 권영현	2010. 4. 5
2010-06	아 · 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	최병학	2010. 4.30
2010-07	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	김양중	2010. 5.10
2010-08	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송두범	2010. 5.27
2010-09	대전 · 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 · 김양중	2010. 6. 3
2010-10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	장동호 · 윤정미	2010. 6.21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0-11	충남 귀농·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	유학열	2010. 8. 9
2010-12	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신동호	2010. 8.16
2010-13	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1998년-2007년)	임재영	2010. 8.19
2010-14	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	이인희	2010.10. 6
2010-15	사람중심,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	조명래·임준홍외	2010.10.29
2010-1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임준홍·김양중외	2010.11.09
2010-17	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	임형빈	2010.11.16
2010-18	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	오용준	2010.12.30
2011-01	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군의 대응방안	한상욱	2011.01.13
2011-02	2011년 충남의 GRDP 전망	김양중·이선희	2011.02.10
2011-03	고령화시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충훈	2011.03.31
2011-04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우선보전 연결구간 선정	사공정희	2011.04.21
2011-05	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임준홍 외3명	2011.05.02
2011-0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상진·김영일	2011.06.23
2011-07	민선 5기 충남도정 1년을 말한다	성태규외	2011.06.30
2011-08	충남 항만 이용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1.07.11
2011-09	박쥐 복원의 필요성과 방안	정옥식	2011.07.27
2011-10	충청남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성태규	2011.08.22
2011-11	기업과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 방안 연구	김양중	2011.10.31
2011-12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지정책의 개선방안	홍성효	2011.11.30
2011-13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정책과 대응방안	이인희	2011.12.29
2012-01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김종수	2012.01.31
2012-02	국내외 농공상 융합기업 지원정책 동향과 시사점	신동호	2012.02.13
2012-03	2012년 충남의 수출입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4	2012년 충남 GRDP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5	충남 가구 주택 특성과 정책방향	임형빈	2012.03.12
2012-06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 협동조합	송두범·김종수	2012.04.02
2012-07	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김영일	2012.05.31
2012-08	충청남도 전원주거단지 정주실태 분석	조영재	2012.06.21
2012-0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충남의 특화산업 분석과 선정	전영노·백운성외	2012.08.10
2012-10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	허남혁·정준	2012.08.16
2012-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	윤정미	2012.09.20
2012-12	농업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공생을 위하여	정옥식	2012.10.31
2012-13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통한 도심녹지체계 확보	사공정희	2012.11.28
2012-14	한·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양중	2012.12.12
2013-01	충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특성분석과 정책수요 도출	홍성효 외	2013.02.21
2013-02	2013년 충남 수출 및 GRDP 전망	김양중	2013.03.07
2013-03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와 해결과제	송두범 외	2013.04.19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